



양계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토종닭 인증기준 연구 추진 재래닭과 토종닭의 정의가 우선돼야

최근 재래닭과 토종닭의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 않지만 재래닭과 토종닭으로 크게 나누어 구분을 해 왔다. 1994년부터 1997년 동안 축산과학원, 양계협회 등을 통한 재래닭 육용화연구사업에서는 재래닭을 한국재래닭, 개량재래닭, 실용재래닭으로 구분하여 외모 형태별 특징 및 생산성 등에 대해 폭넓은 연구를 한 바 있다.

당시 축산과학원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외래종과 구분 짓기 위해 순수하게 전해내려오는 닭을 재래닭이라 명명하고, 토종닭보다 의미를 넓게 구분해 왔으며 토종닭은 지역에 따라 특색있는 외모형태나 특징을 갖는 좁은 의미의 재래닭으로 정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재래닭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육되어온 닭으로 근래에 다른 품종과 섞임이 없이 분리사육되어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서 사육유래가 명확하고 계대번식 내역 및 세대별 순계능력 검정기록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 7세대 이상 순수혈통으로 유지되어온 확실한 기록에 근거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

지난달 축산과학원에서는 '토종닭 인증기준 및 발전방안 공청회'를 열고 연구기관, 생산자 단체, 농가, 산업체에서 참여한 가운데 '토종닭 사육 및 인증기준 설정 연구'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토종닭이라는 큰 범주안에 재래닭이 포함되면서 기존의 내용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토종닭 순계의 정의를 사육유래가 명확하고 계대번식 및 세대별 검정기록이 있어야 하며, 최소 7세대 이상 순수혈통으로 유지되어온 확실한 기록에 근거하여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국내 순수 재래닭과 외국종중 국내에 완전히 토착된 품종으로 나누었다. 즉, 순수 재래닭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육되어온 닭으로 근래에 다른 품종과 섞임이 없이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계통분류상 모색에 의해 적갈색종, 황갈색종 등과 유래지역에 의해 파주재래닭, 제주재래닭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외국종중 국내에 완전히 토착된 품종으로는 로드아일랜드레드종, 플리머스록종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국내에 가장 많

이 사육되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토종닭 품종은 (주)한협육종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종이다. (주)한협육종은 로드아일랜드 2계통, 뉴햄프셔, 플리머스록 3계통, 코니쉬 3계통을 교잡해 만들어낸 품종으로 오랜 세월동안 계대유지에 의해 국내에 완전 토착화된 대표적인 품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MBC-TV의 한 시청자 프로그램에서는 '토종닭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토종닭'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백세미의 토종닭 둔갑과 외국에서 도입된 'S' 품종이 토종닭 업계에서 토종닭 인증기준 논란에 휩싸이는 등 토종닭 업계가 혼란속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토종닭 인증에 대한 기준이 논의되는데 대해 무척 고무적으로 생각되면서도 과거 연구되어오던 토종닭과 재래닭의 정의가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면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즉, 과거 정립되어진 재래닭에 대한 정의가 축소된 점과 외국품종에 대한 토종닭 인증 등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혼돈을 없애기 위해 범업계적인 협의체가 구성되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정한 토종닭 업계의 활성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신정부에 바라는 양계정책 제안 양계산업 안정화에 혼신을

지난 2월 신정부가 출범하고 신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부임하면서 농어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36개 농어업인 단체들로부터 280건에 달하는 정책제안을 받아 3월말까지 접수되는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접수된 정책제안에 대해 검토하고 정책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출된 정책안은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최근의 국제곡물, 유류가격 상승에 대한 보완 방안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분회를 중심으로 한 양계업계에서는 육용원종계 쿼터제 도입 등 8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크게 볼때 양계산업 안정화에 대한 내용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최근 사료가격 상승과 과잉생산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어업인들과 정부가 함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나가는 분위기가 정착되면 정부와 농어업인 등 정책 수요자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정책의 실효성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양계인들이 정부에 거는 기대는 사뭇 크다고 할 수 있다.

양계분야에서는 육용원종계 쿼터제 의무화, 배합사료가격 안정화 기금설치, 양계의무자조금 추진, 공정한 계란가격 형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 위생적인 삼계탕용 닭 생산체계 구축, 국내 양계용 백신 생산기술의 육성지원, 계분 자원화 사업 지원, 축사시설 신축에 따른 사전협의체 구축 등이 이번 정책제안에 포함되어 있다. 양계산업에 있어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될

사황이 걸려있는 사안들이다. 양계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한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본문 104쪽 참조)

계분 자원화 사업 충분히 승산 있다 계분 발효·건조 시설 지원 필요

계분은 퇴비로 자원화 할 경우 화학비료보다 매우 우수하고 타 축종에 비해 품질이 좋아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자원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계분자원화 시설의 보급이 미흡하고 수요기 철을 제외하면 사용이 적어 양계농가들이 계분처리에 큰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서는 양계농가에서 배출되는 계분은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장에 의거 건조·발효과정을 거쳐 퇴비로 자원화되거나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통해 적절히 처리되면서 과거에 비해 농가의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하지만 퇴비화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는 계분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여 농장에서 돈을 들여서까지 처리해야 하는 곳이 많다. 따라서 현재 과수농가 등에서 비료를 사용할 경우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것을 계분을 사용할 경우 지력향상은 물론 작물 생산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어 정책적인 뒷받침 하에 계분의 자원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에는 소위 '깻묵'으로 불리는 '유박'이 친환경농업과 함께 등장하면서 계분의 설 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박은 퇴비에 비해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비료 효과도 빠르며 비료의 함량도 퇴비에 비해 높기 때문에 유박을 선호하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정한 친환경농업은 유박보다는 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유박은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발효된 유기물이기 때문에 퇴비와 비교할 수 없으며, 유박은 속효성이고 지력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박의 대부분은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수입되는 유박은 수입 곡물과 마찬가지로 수입과정에서 각종 방부제나 농약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친환경농업에 적합하다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사료 등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계분까지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당치 않은 처사라고 볼 수 있다. 가격 면에서도 유박보다 계분을 사용한 퇴비가 더 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만수 산란계 농장에서 계분발효 건조시설을 구비할 경우 약 3억정도의 투자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계분자원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계분발효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며, 경작농가들에게 교육을 통해 계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계**